

미래적금 기준 완화… 취업·혼인·양육 ‘생애 주기별’ 지원

‘청년 예산 연박싱 2027’ 핵심내용

내년 예산 43.3조… 약 15조 늘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하고
대출 등 부부합산 ‘결혼페널티’ 해소
구직수당 월 최대 65만원 지급

정부가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을 위해 청년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만을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상품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이 소득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청년 예산 연박싱(U NBOXING·최초공개) 2027’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28조2000억원)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수치다.

◆ ‘청년미래적금’ 개편

가장 큰 변화가 예정된 것은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납입액 대비 6~12%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가입기관에서도 일반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년예산 연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폐지하며, 가구 소득 요건도 없앤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미래적금은 당초 연간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반형도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일반형에 한해 가입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이번 가입 요건 폐지에 따라 당초 청년 580만명을 가입 대상으로 했던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대상을 960만명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청년미래

적금’의 혜택은 늘린다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청년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납입액 대비 12%의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15%로 오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지급비율을 25%까지 늘린다.

◆ 생애주기별 지원

정부는 취업부터 혼인·양육까지 청년의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며, 혼인·양육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혼인신고시 발생가능한 정책적 여차별 등 불이익을 해소한다. 혼인신고나 출산 시에도 직접적

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감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취업 경험미 부족한 청년이 첫 일 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정부의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로탐색이 일경험과 훈련,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취업준비청년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월 최대 65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창업 이후에 연 2~5% 수준의 낮은 금리에 상환할 수 있는 ‘신규청년기회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공급되며, 최대 3회에 나눠 자금을 지원한다.

첫 취업 시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간극을 매우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 최대 2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만 한정됐던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청년의 결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각종 대출상품이나 정책 이용 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했는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수준을 충족하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거사다리’도 개선한다.

월세 거주 청년을 위해선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제공됐던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늘린다. 또한 차상위 이하 청년에는 최대 24개월간 제공됐던 월세 지원 기간을 48개월까지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총급여 연 8000만원 이하의 청년에는 세액공제율을 17%까지 우대하며,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전세 거주 청년의 거주 안정을 위해선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200%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토부가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소득 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까지 늘린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에는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주거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도 자가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본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공공분양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역세권, 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공급한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현대캐피탈, 14억 시장 공략… 인도서 첫 금융법인

현대차그룹, 50억 달러 투자 발맞춰
캐피탈, 자동차 소매금융 인프라 마련
인도법인 출범 계기로 해외사업 확대

현대캐피탈이 인도에 금융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현지 자동차금융 시장을 공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도 사업 확대에 발맞춰 딜러금융부터 소매금융까지 다양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31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법인 형태로 ‘현대캐피탈 인도’를 새롭게 출범한다. 현대캐피탈 인도는 현대캐피탈의 14번째 금융법인이자, 합작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춘 해외법인이다.

◆ 딜러금융부터 시동

이번 인도 금융법인 출범은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인도 사업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30년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인도’ 금융법인 출범 소개 이미지.

/현대캐피탈

까지 인도에 50억달러를 투자, 총 26종의 신차를 출시한다.

현대캐피탈도 현지 사업 영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자동차 판매 딜러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금융에 집중한다. 자동차 소매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안정적인 영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인도는 현재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비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한 데다 수년간 6~7%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 오면서다.

◆ 자문법인서 금융법인으로

현대캐피탈은 통상 해외 시장 진출 시 지점이나 자문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금융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한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뒤 본격적인 금융 영업에 나선다는 전략에서다.

현대캐피탈 인도 역시 지난 2012년 자문법인 형태로 처음 출범했다. 이후 약 14년간 현지 시장을 조사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오다 지난 3월,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비은행 금융회사 사업권을 획득했다. 금융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

단계적 진출 전략은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활용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24년 호주 자문법인을 금융법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법인을 출범시켜 기존 자문법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해외 금융법인 외형 성장

이번 인도 금융법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현대캐피탈 호주와 인도네시아 금융법인 자산 합계는 1조1687억원이다. 지난해 말 7949억원 대비 약 47% 증가했다. 두 법인은 인도 금융법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금융법인이다.

현대캐피탈은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 온 자동차금융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 시장과 고객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형진 현대캐피탈 사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자동차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도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판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수도권 착공 1만2690호… 공급지표 개선

국토부, 7월 주택통계
서울지역 착공 6386호, 전년의 10배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은 부진했지만 인허가와 착공은 늘면서 향후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착공은 1만26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했다. 연초 이후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7만7894호다.

특히 서울 지역 착공은 638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누적 실

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1만 9507호로 집계됐다.

분양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 7만 3991호, 서울 1만4489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109.7% 증가했다.

인허가는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8만5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지만 서울은 2만8834호로 전년 동기 6.1% 증가했다.

준공은 전국이 큰 폭으로 줄었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수도

권과 서울 준공은 7만1204호, 2만9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7%, 43.3% 감소했다.

7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8217호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2만9152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7월 주택 매매거래는 6만3185건으로 전월 대비 8.2%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역시 21만985건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은행

“전국 2400개 우체국서 금융서비스 이용하세요”

고객 접근성 향상… 내달 시행

오는 10월부터 우체국 창구를 통해 BNK부산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체국의 전국 단위 금융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 고객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2400여 개 우체국 창구와 ATM을 통해 입·출금, 계좌조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NK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을 비롯해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BNK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과 고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